

원유 체화의

근본대책



장 성 종

한국유가공협회 상무이사

근간의 원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 분유의 체화현상은 자못 심각한 바가 있다. 이는 단기적인 우유소비 확대에 만으로는 주기적으로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파동을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과거의 우유 소비증가 추세와 우유체화의 주기를 검토한 후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우유 체화의 주기

1962년도에 서울 우유협동조합에서 가낭연유 공장이 설립 가동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유를 가공 저장하는 시설이 없었으므로 수유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고 또한 그당시는 낙농가들도 이러한 현상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연유가 생산되고 특히 65년부터 조제분유가 생산된 이후 적어도 수유 거부 및 원유폐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정부의 낙농개발 계획에 힘입어 급속한 빌전을 이루하여 왔었으며 성수기인 하절기에 원유가 부족되나 비수기인 동절기에는잉여되는 원유로 연유 또는 조제분유를 생산함으로써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급격한 수유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공 시설 능력의 증설이 뒤따르지 못하자 1972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원유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수유거부 사태가 발생하여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었다.

그이후 79년 상반기까지는 매년 성수기에 원유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비수기에는 다소 체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원유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79년 5월에는 원유의 수급 조절용 탈지분유를 1,000톤수입 하였으나 79년 하반기 부터 밀어 닥친 국제 석유 가격인상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는 우유소비의 격감을 초래해 수입분유 뿐만 아니라 국산 분유의 재고도 계속 증가하여 80년도 초에는 전지 분유로 환산 8千여톤의 막대한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유업체의 공동 홍보와 전국적인 학교급식의 실시로 81년도에는 그많던 재고분유가 모두 소진되고 82년도에는 원유 부족으로 전지분유를 1,500톤 수입하였고 83년도에는 전지분유 1,000톤, 탈지분유 100톤을 수입 하였다.

특히 83년도 9월부터는 원유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아이스크림 및 식품업체에서는 분유의 수입개방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 하였으며 따라서 83년말에는 84년 원유수급을 위해 정부에서 전지분유 1,500톤, 탈지분유 500톤 도합 2,000톤을 발주하였고 84

년 3월과 4월 사이에 또다시 전지분유 1,200 톤, 탈지분유 300톤을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유수급조절 정책은 비축제도에 의한 수입 또는 수매비축 방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수입하여 유업체 또는 식품업체에 수입과 동시에 분배하는 형식의 수급조절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수급조절 정책이라고 할수 없었으며 또한 원유가 남거나 부족 되는데 따라 즉시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나 예측된 시점에서 구매 발주하게 됨으로써 수입물량을 가지고 부족현상을 충당하는데에는 약 3개월이라는 시차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수요에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없고 또한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많았던 것이다.

84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유의 소비증가율이 극히 둔화되어 84년도의 연평균 원유 납유량은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반면 소비의 증가율은 14.4% 증가되어 연말에는 4,500여톤의 전지분유 재고와 1,000여톤의 수입 전지분유 재고가 85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85년도에 들어와서는 한우의 가격 하락이 젖소의 가격하락을 불러와서 젖소가격이 84년 4월에 암송아지 기준 135만원에서 85년 4월은 90만원선으로 35%나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경제성이 없는 젖소를 도태하지 않으므로써 원유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9% (4월말현재) 가 증가하여 원유의 생산 증가율은 예상보다 높은데 비하여 소비는 경기침체와 작년 연말과 금년초의 독극물 사전에 의한 식품업체의 불황으로 10%밖에 증가하지 못하므로 소비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아 5월말 현재 재고량이 9천여톤에 육박 함으로써 또 한번의 심각한 우유 체화현상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급한 소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깊게 원유 체화의 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즉 62년 이후 10년만인 72년도에 원유파동이 있고 72년 이후 8년만인 79년도에 또 한번의 체화현상을 겪었고 79년 이후 6년만인 84년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한번의 체화현상을 겪게 되었는 바 우리는 여기서 우유체화의 주기가 우유의 생산

량이 증가됨에 따라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한 매년 소비의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기인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표 1 참조). 따라서 이러한 체화의 주기가 가속화 함에 따라 금년도의 체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표 1. 연평균 우유소비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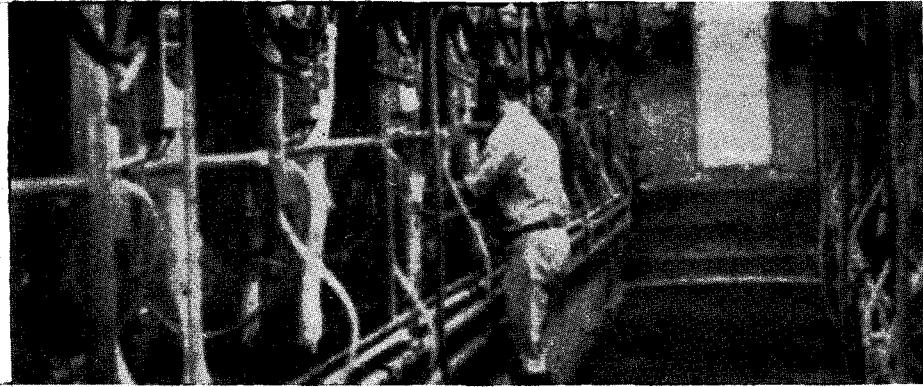
년 도	연평균증가율
65 ~ 69년	38.3 %
70 ~ 74년	29.5 %
75 ~ 79년	24.3 %
80 ~ 84년	17.8 %

물론 단기적인 대책이 장기적인 대책에도 포함될 수 있는것도 있는바 예를들어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대책에서도 빠질수 없는 요인지만 여기서는 단기대책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여기에 제시된 단기 대책은 유가공협회에서 그동안 정부에 전의하거나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것을 중심으로 한것이다.

2. 단기대책

가. 시유의 용량 조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유 포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포장의 용량은 180ml로서 이는 과거부터 척관법에 따라 한홉을 기준하여 왔던것이 그대로 지속되어 온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동안 몇차례 180ml 시유의 용량을 200ml로 조정하는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행동 통일문제, 실시이후 우유소비량 증가로 원유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보류되어 왔었다. 85년 4월 한국 유가공협회의 이사회 결의와 전유업체(회원사, 비회원사 전체)가 동시에 실시 한다는 결의에 따라 1985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소포장 시유의 용량 조정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유를 더 마실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다소나마 기여할것을 확신하며 또한 우유의 용량 조정은 85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전지분유 5,700톤의 소비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 공동 홍보의 실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우유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은바 공동홍보를 통하여 잠재수요개발과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한국유가공 협회에서는 84년 11월부터 85년 1월까지 4억원의 공동비용을 회원사들로부터 거출하여 실시하였으며 85년 6월부터 7월까지 또다시 3억원을 거출하여 시유 용량조정에 따른 고지광고와 소비확대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회원사들은 공동 광고에 대한 인식이 깊지못한 형편에 있으나 지속적인 공동 홍보는 우유 소비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것이다.

다. 특별소비세 면제

유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매년 특별소비세에 대한 면제를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에서는 세수입 결함을 이유로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특별 소비세의 부과는 결국 우유가 들어가는 양질의 아이스크림 소비는 억제하고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불량한 아이스크림의 소비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하여는 하루 속히 아이스크림과 밀효유의 특별소비세는 면제 되어야 하겠다.

라. 학교급식의 확대

1) 국민학교 급식의 확대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으며 84년도의 급식의 대상인원 1일 162만명에서 85년도에는 238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나 급식에 대한 학교측의 인식 부족으로 급식에 제약을 받는곳이 많은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위향상 및 편식 위주의 식습관에서 탈피하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학교에 대한 학교 급식은 전체아동에 대한 급식으로 확대 되어야 하겠다.

2) 중고등학교 급식의 확대

신체 발육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때가 가장 왕성한 때이며 또한 시험공부 등을 위한 체력 유지를 위하여도 우유는 필수식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의 우유 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겠다.

마. 모조분유 및 식품용 유당의 전면수입중지

84년도 기준으로 모조분유 및 식품용으로 수입된 유당의 양은 2,000톤으로서 이는 5천~ 6천톤에 해당하는 전지분유의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바 이는 수입 자유화 품목으로 있는 카제인과 물엿, 식물성유지 등을 유당과 혼합하여 모조 전지분유를 생산판매 하게 되므로 전지분유 2.5배~ 3배의 수입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바 모조분유 및 식품용 유당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전지분유의 소비확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바. 송아지 분유용 유제품 수입억제

송아지는 원래 어미젖을 먹고 자라게되어 있으나 낙농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대용분유를 먹이고 있다.

대용분유의 원료는 대부분 탈지분유와 유장분말로서 이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제품이 체화되어 고침하고 있는 차제에 유제품이 계속 수입 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며 유제품 체화기간 동안만이라도 낙농가들은 송아지에게 어미젖을 먹여 우유 생산량을 억제 하든지 송아지분유 제조업체에서 국산분유를 사용하는 것이 우유체화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길이라 하겠다.

사. 분유 수출

우유체화 해소의 최종적인 방법으로서는 우유 수급 조절 기능의 하나로서 잉여되는 분유를 수출하고 부족시는 다시 수입하되 수출시의 적자는 수입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으며 한국 유가공협회는 정부 지시에 의하여 전자분유 2,000톤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6월중에 수출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유체화에 따른 원유 수매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원유 수매자금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3. 장기대책

가.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 제도화

종전의 수급조절은 부족시 수입하여 분배하여 주는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수급조절 업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부족시 수입에서부터 잉여시 수매, 비축, 수출, 부족시 방출등 제반업무를 제도화 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줄때 안정적인 소비증대가 이루어 어질 것이다. 종전의 예로 볼때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에 따른 수요가 공급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가 대체되어 전체적인 수요량은 감소된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예: 유당을 이용한 모조분유의 생산).

나. 계획생산제도의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의 증가율은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므로서 90년도 이후에는 선진국과 같이 만성적인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하게 될것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계획생산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에 상응하는 생산을 해나가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수급조절은 수요의 90~95%만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는 원칙을 수립하여야만 공급 과잉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물론 계획생산을 위하여는 생산물량의 지정등 집유업무의 일원화 문제가 뒤따르게 될것이다.

다. 계절별 등급별 유가제도 실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는 원유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기본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는 유질에 따른 유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첨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원유는 지방률에 의한 유가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률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세균수, 체세포수, 무지유고형분량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유가산정 방식에 도입하여 등급에 따른 유가를 결정함으로써 유질을 향상 시킬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과 같이 시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거나 정부의 수매비축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비수기와 성수기에 유대차이를 둘으로써 낙농가로 하여금 성수기에 원유 충산을 유도하여 비수기 체화에 따른 유가공업체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라. 기타

이 이외에도 우유 소비확대를 위하여는 계속적인 제품개발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계획생산에 따른 분유 가공시설의 소요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낙농 및 유가공업의 경영합리화, 계속적인 유제품의 수입 억제 조치등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와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